SIEW REPORT
Seoul Institute for Evangelical Worldview
2026년 제9호
한국교회 목회자와 리더를 위한 전략보고서

대한민국의 방패에 균열이 가고 있다

- 북핵 고도화 시대,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다 -

작성자: 이윤석 박사
발행일: 2026년 9월 27일
발행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이 리포트는 고유 방법론 SIEW Framework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자료 탐색·정리와 초안 작성 과정에서 AI 보조 도구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주요 사실과 논거는 연구진의 검토·수정 과정을 거쳤으며, 최종 내용과 판단에 대한 책임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저작권은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리포트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 이슈 한 줄 정의

-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핵·미사일·드론·장사정포·해군 전력과 실전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군 지휘·인력·훈련·방첩·동맹체계의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전체 방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커지고 있음

□ 현재 상황 요약

- 북한은 **약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ICBM, 고기동 미사일, 600㎜ 방사포, 드론, 핵추진잠수함 등 다양한 육·해상 전력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 실전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음
- 북한은 MDL 일대에 철책·지뢰·전술도로 등 '국경선화' 공사를 확대하고 있고, 지난 8월에는 MDL 월선이 월 20회를 넘는 등 **접경지역 위험도 커지고 있음**
- 대한민국도 다양한 형태로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동시에 **군 지휘부 교체, 숙련간부 이탈, 대공수사권 이전, 방첩사 재편, 군 조직개편** 등 방위체계의 핵심 요소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한미연합훈련 야외기동훈련 감소와 2026년 UFS 단축, 미국 방공전력의 중동 차출과 일부 민감정보 공유 제한 등 **연합방위체계에도 새로운 변수**가 발생함

□ 핵심 문제

1. **위협과 대비태세의 속도 차이**: 북한은 핵·미사일·드론·실전능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체계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 필요함
2. **사람·지휘·방첩체계의 동시 변화**: 숙련간부 이탈, 지휘부 교체, 대공수사·방첩체계와 군 조직의 동시다발적 개편이 **전문성과 지휘 안정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함
3. **연합방위와 전쟁지속 능력의 불확실성**: 한미훈련 변화와 미국의 다중전선 부담 속에서 **한국 스스로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 결론

- 핵심 질문은 첨단무기가 충분한가에만 있지 않음. **무기·사람·지휘·훈련·정보·방첩·동맹이 하나의 방위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가**를 함께 보아야 함
- 국가안보는 발생확률뿐 아니라 실패 시 피해까지 고려해야 하며, 국가 존립이 걸린 위험에는 **최악 상황과 복합위기까지 대비하는 예방적 안보관이 필요**함
- 따라서 개별 정책의 명분을 넘어, 최근의 모든 변화가 누적된 결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실제로 더 강해졌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함**

☞ 문의처: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사무국 (홈페이지: www.siew.or.kr)
- 전화: 010-4682-0191 / 카카오톡 ID: siewsiew / 페이스북 그룹: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이메일: siewsince2021@naver.com / 후원: 농협 355-0077-2712-43 예금주: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 S - Scan |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 핵심 질문:

"북한은 핵·미사일·드론·장사정포·해군전력과 최전방 군사시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대한민국의 지휘·인력·훈련·경계·정보·방첩·동맹체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 본 리포트의 조사대상은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026년 9월까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변화와 대한민국의 지휘·인력·훈련·경계·정보·방첩·동맹체계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건으로 함. 이와 직접 연결되는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전 등 선행 변화도 분석범위에 포함함

① 분석의 출발점 — 이미 달라진 위협과 한국군의 구조적 변화

[1] 북한은 상당한 핵전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했음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26년 북한이 **핵탄두 약 60개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 30기 추가 생산 가능한 핵물질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함.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2026년 8월 북한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 언급했음
- 북한은 차세대 고체연료 화성-20 ICBM과 미사일방어망 회피를 위한 고기동 미사일체계를 개발하며 핵무기 증산 의지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음
- 북한은 2024년 이후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노선을 공식화**했고, 헌법에서도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을 별도의 국가로 다루는 **'두 국가' 체계를 반영**했음
- 따라서 북핵 문제는 미래의 핵보유 여부가 아니라 **이미 확보한 핵무기를 얼마나 증강·다종화하고 실제 전쟁수행체계에 편입할 것인가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

[2] 북한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 실전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음

- 북한은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하고 탄도미사일과 막대한 포탄을 제공했으며, 한

국 국방부는 2026년 8월까지 **152㎜탄 환산 1,500만발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추산함

- 북한군은 드론·포병 연계, 전자전, 지뢰·참호전 등 실제 전쟁을 경험했으며, 미사일도 실전자료와 러시아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성능이 개선될 가능성이 제기됨
- 한국전쟁 이후 북한군의 가장 큰 해외 실전개입으로, 일부 **북한군이 평시훈련만으로 얻기 어려운 전장 경험을 축적했다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음

[3]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군 주요 지휘체계는 대규모 수사·인사교체를 겪었음

-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관련 장성·장교에 대한 수사·재판·직무정지와 인사조치가 장기간 이어짐
- 2026년 2월 국방부는 24개 부대·기관을 조사해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약 180명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114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힘
- 육군참모총장·특전사·수방사·방첩사 등 핵심 지휘·작전조직이 이 과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

[4] 한국군의 허리인 숙련 장교·부사관 이탈과 신규간부 감소도 장기화되고 있음

- 10~20년 복무 중견간부 희망전역은 **2021년 960명에서 2024년 1,821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도 9월까지 1,327명이 희망전역을 신청함
- 휴직도 2021년 2,252명에서 2024년 3,412명으로 늘었으며, 부사관 신규 임관자는 2021년 약 1만550명에서 2024년 약 6,750명으로 감소함
- 육군 장교 신규 임관 역시 2021년 약 4,860명에서 2025년 약 3,710명으로 줄어, 병력감소와 숙련간부 확보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5]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2024년 경찰 이관 이후 대공수사 역량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020년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전되면서, **국정원이 축적한 북한·해외 공작정보와 압수수색·체포 등 강제수사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분리**됐음
-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2025년 6월, 현업 직원들이 현행 조사권만으로 대공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조사권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음

- 2026년 안보경찰의 68%가 안보수사 경력 5년 미만이고, 10년 이상 경력자는 12%에 불과해 **간첩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21~2023년 국정원·경찰 합동수사 체제에서는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연평균 5.7명을 검거했으나, 경찰 전담 이후인 2024~2025년에는 연평균 2명으로 감소함. **검거 건수만으로 역량 약화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목적수행 사건 감소는 대공수사 전문성과 사건처리 역량이 약화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음**

[6] 간첩죄의 적용 범위는 2026년에야 북한 외의 외국까지 확대됐음

- 종전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를 규정해 사실상 북한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음
- 중국·러시아 등 다른 국가를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제공해도 일반 형법상 간첩죄 적용이 어려운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돼 왔음
- 여러 차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다가 2026년 2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9월 13일부터 외국 등을 위한 간첩행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됨
- 이는 방첩 강화라는 긍정적 변화인 동시에, 그만큼 **오랫동안 현대적 다국가 정보전에 맞지 않는 법적 공백이 유지**됐다는 사실도 보여줌

②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 긴장완화 정책과 북한 군사력 고도화가 동시에 진행됨

[7]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민간 대북전단을 중단·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평화공존' 중심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5년 6월 11일 정부는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이유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도 다음 날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함
-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가동했으며, 이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강화됐음
-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포괄적으로 금지·처벌했던 과거 법률조항은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바 있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표현·정보전달의 자유를 어떻게 함께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

- 대북전단·풍선은 일부 민간·기독교단체가 **성경·USB·식량 등 외부 정보와 물품을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해 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과 신앙의 자유 문제와도 연결돼 있음
- 정부는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재개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입장을 유지하며 핵·미사일과 군사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8] 2025년 UFS에서는 예정된 야외기동훈련의 절반가량이 뒤로 연기됐음

- 2025년 UFS(Ulchi Freedom Shield) 기간 계획된 약 40건의 한미 야외기동훈련 가운데 **22건이 뒤로 조정**됨
- 군은 폭염과 연중 균형 있는 훈련 등을 이유로 설명했고, 남북 긴장 완화 기조와 연관됐다는 해석도 제기됨
- 연기된 훈련은 결국 연말까지 모두 완료됐으므로 이를 '훈련 취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9] 북한은 2025년 화성-20을 비롯한 차세대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했음

- 북한은 차세대 고체연료 ICBM 화성-20을 공개했고, 2026년 3월에는 최대추력 **2,500kN의 신형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함
- 미사일뿐 아니라 **600㎜ 방사포**, 드론, 전차, 자주포, 방공망 등 여러 전력을 동시에 현대화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특정 전략무기 하나에 그치지 않고 **핵·미사일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함께 고도화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10]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국경선' 형태로 재구축하고 있음

- 북한은 2024년 이후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일대에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며 대전차 장애물, 불모지, 전술도로 등 대규모 공사를 진행함
- 국방부는 2026년 8월 **북한의 국경선화 공사가 약 250㎞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전망함

- 탈북·월남 차단 목적과 함께 군사적으로 병력이동과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접경지역 기반시설이 장기간 확대되고 있음

③ 2026년 상반기 — 훈련·방첩·전방시설·동맹체계의 변화가 본격화됨

[11] 북한은 600㎜ 방사포와 신형 장사정 화력을 양산·전방배치 단계로 발전시키고 있음

- 2026년 2월 북한은 **신형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공개**했고, 8월에는 국방부가 이 체계의 **휴전선 인근 배치를 처음 공식 확인**함
- 600㎜ 초대형 방사포(KN-25)는 1994년 북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 당시 주로 거론되던 240㎜ 장사정포보다 사거리·정밀도가 크게 향상된 체계로, 약 400km급 사거리를 가져 서울·평택·계룡 등 주요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음. 북한은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소형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하는 형태도 공개했으나, 실제 핵탄두 운용능력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님
- 북한은 240㎜ 방사포·155㎜ 연장탄·전술탄도미사일 등도 함께 개발하고 있어, **전방 화력이 정밀화·장거리화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음

[12] 2026년 Freedom Shield의 야외기동훈련은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감소했음

- 3월 Freedom Shield 지휘소연습은 11일간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약 1만8천명의 병력이 참여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절차와 전쟁계획을 점검**함
- 그러나 연계 야외기동훈련은 **2025년 51회에서 2026년 22회로 절반 이하로 감소**해, 실제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현장훈련 규모는 크게 줄었음
- 한미 군 당국은 일부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실시해 대비태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13] 미국-이란 전쟁으로 한반도 배치 미군 방공전력 일부가 중동 이동·차출 대상이 됐음

-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는 2025년 중동에 임시 배치됐다가 복귀했으며, 2026년 이란전쟁 확대 이후 다시 패트리엇 전력이 오산기지로 이동함
- 성주 THAAD도 발사대 6기가 오산기지로 이동해 요격미사일을 하역했고, 주한

미군사령관은 이후 THAAD 체계 자체는 한국에 남아 있지만 **일부 요격탄은 중동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밝힘

- 한반도 배치 미사일방어 전력도 다른 전구 상황에 따라 이동·재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14]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민감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음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 3월 국회에서 영변·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공개 언급**함
- 구성은 공개 연구자료에서 핵시설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한미 당국이 우라늄 농축시설로 공식 확인한 곳은 아니었음
- 이후 미국은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관련 기술정보 일부의 한국 공유를 제한**함. 단 미사일 발사 감시 등 일반적 한미 정보공유는 계속된다고 한국군은 설명함

[15]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여러 조직으로 분산 재편됐음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제기된 정치개입과 권한집중 문제를 이유로 2026년 6월 **49년간 유지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함
- 기존 방첩사의 핵심 기능 가운데 방첩·방산정보와 사이버보안은 신설 국방방첩본부로,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보안감사는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분산·이관됐음
- 기능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하던 방첩·수사·보안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분리되고 기존 인력도 상당수 재배치돼**, 오랜 기간 축적된 전문인력·정보와 기관 간 협업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승계되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됨

[16] 민통선은 북상하고 군사장애물 23개소는 철거 대상이 됐음

- 국방부는 2026년 6월 민통선을 MDL 남쪽 평균 **약 8㎞에서 약 6㎞ 수준으로 조정**하고 CCTV·경계펜스 등 대체 통제수단을 설치하기로 함
-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시설 가운데 군이 작전적 효용성이 낮아졌다고 평가

한 **대전차장애물 등 23개소를 2027년 우선 철거**하기로 함

- 국방부는 무기체계 발전과 도로망 변화, 주민 재산권 등을 정책 배경으로 제시함

[17]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며 구체적인 목표연도 설정 절차에 들어갔음

- 이재명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권한) 전환을 **2030년 임기 종료 이전에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안규백 당시 국방장관은 2026년 6월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 검증 등을 거쳐 연말 한미 정상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겠다고 밝힘
- FOC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전시에 연합군을 지휘할 완전운용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전작권 전환 과정의 핵심 단계임

[18] 북한은 핵무기 운용을 염두에 둔 핵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하며 해군의 핵전력화를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2023년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2025년에는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공개**했음
- 북한은 이 잠수함을 전략적 핵억제 전력으로 규정하고 **'해군의 핵무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 미사일 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음
- 2026년에는 5,000t급 신형 구축함까지 '국가 핵반격체계'의 일부로 규정하는 등, 북한 해군 현대화가 **수상함·잠수함을 핵전력 운용체계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실제 핵탄두 탑재·SLBM 운용능력이 완성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성공할 경우 북한은 **지상뿐 아니라 해상·수중에서도 생존성 높은 핵보복 능력**을 확보하게 됨

④ 2026년 하반기 — 군조직개편·접경위험·연합훈련 변화와 북한의 복합타격 능력이

동시에 나타남

[19]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이 공식 추진됨

- 2026년 7월 정부와 여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우수인재 확보, 군별 장벽 완화, 합동성과 첨단과학기술 교육 강화를 추진 배경으로 제시함
- 각 군의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규모 군 교육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생도·학부모, 예비역 등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동의청원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하고 국방부 공청회에서도 거센 찬반 충돌이 나타나는 등 정책 수용성과 충분한 공론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20] 북한군의 MDL 월선이 급증했고 DMZ 지뢰 추정 폭발사건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음

- 북한군의 MDL 월선은 2025년 한 해 17회였으나 **2026년 8월 한 달에만 20회를 넘어섰음**
- **9월 21일 서부전선 DMZ 수색작전 중 두 차례 지뢰 폭발로 군 간부 3명이 부상**했고, 첫 폭발로 다친 부사관을 구조하던 수색대대장이 두 번째 폭발로 발목을 잃는 중상을 입음
- **2015년 DMZ 목함지뢰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6일 만에 북한 소행이라는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응조치**에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사고 발생 닷새 만인 9월 26일에서야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와 작전환경 조사에 착수해 **원인규명과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군은 추가 지뢰 위험과 유엔사 협의 등으로 현장 접근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으며, **폭발물의 종류와 매설 주체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임**

[21] 2026년 UFS는 훈련 도중 11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됐음

- 8월 17~27일 실시 예정이던 UFS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21일 종료돼 11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됨

-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비용과 한국의 대이란전 협조 문제 등을 거론했고, 한미는 축소된 일정으로 훈련을 진행함
- **핵심 연합훈련이 이미 시작된 뒤 일정과 규모가 크게 변경된 이례적인 사례**임

[22] 북한은 드론·미사일·방사포를 연계한 복합타격과 요격회피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 2026년 9월 북한은 공격드론,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결합하는 **복합 화력훈련을 실시**함
- 9월 20일에는 원산 일대에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각각 약 450㎞와 600㎞ 이상을 비행시켰음
- 공개된 신형 체계는 기동성과 **미사일방어망 회피 능력을 강화**하려는 개발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3] 안규백 장관 재임 14개월 동안 국방 지휘·조직·방첩체계의 대규모 변화가 연이어 추진됐음

- 안규백 장관은 2025년 7월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문민 국방장관으로 취임했으며, 오랜 국회 국방위원 경력은 있었지만 방위병 출신으로 **야전·합동·한미연합작전 지휘 경험은 없었음**
- 재임 중 **방첩사 해체, 드론작전사령부 해체·기능 분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전작권 전환 가속화** 등 군 핵심 조직과 지휘체계의 큰 변화가 연이어 추진됐음
- 안 장관의 과거 군 복무와 관련한 군무이탈·구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본인과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으나 **병적자료 비공개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음**

※ 동시에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존재함

-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2026년 6월에도 정상 가동됐으며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억제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재확인함
- 한국군은 정찰위성·미사일방어·대포병체계와 함께 드론·대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2029년까지 약 6만대의 무인체계를 배치하고 50만명의 드론

운용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함

-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대 중반 첫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방위역량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핵심은 새롭게 강화되는 전력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방위태세가 북한 위협의 증가속도와 동시다발적인 내부 변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가임

[핵심 정리]

- 북한은 핵·미사일·장사정포·드론·해군·접경시설·실전경험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도 첨단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군 지휘부, 숙련인력, 연합훈련, 대공수사, 방첩조직, 전작권, 군 교육체계, 전방시설에서도 큰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이제 중요한 질문은 개별 정책마다 명분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모든 변화가 합쳐진 결과 대한민국의 억제력과 전투준비태세가 실제로 더 강해졌는가**임

■ I — Interpret |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보는가

✔ **핵심 질문:**

"전쟁을 원하지 않는 국가는 외부의 악과 침략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1]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맡은 공적 기관임

- 로마서 13장 1~4절은 국가권력이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가진다고 설명함
- 이것이 국가의 무제한적 권력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국민을 폭력과 침략으로부터 지키는 일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라는 점은 분명함
- 국방은 여러 정책 가운데 하나이기 이전에 국민의 생명과 자유로운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 공공재임

[2] 성경적 평화는 무방비나 현실에 대한 낙관주의를 의미하지 않음

-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마 5:9)를 복되다고 하며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와 폭력의 현실도 직시함
-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한 손으로 일을 하고 다른 손으로 무기를 잡아 외부의 공격에 대비했음(느 4:16~18)
- 따라서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라 할 수 없음**
- **충분한 방위력과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전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음

[3] 지혜로운 공동체는 위험을 미리 보고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함

-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잠 22:3)라는 말씀은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임을 보여줌
- 국가안보에서는 위험의 발생 가능성뿐 아니라 현실화됐을 때의 피해 규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 또한 지휘·정보·훈련·동맹·접경위협 등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위기까지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위험관리**임
- 핵공격이나 전면전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더라도, 한번 현실화될 경우 국가 존립과 수많은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함
- 임진왜란 직전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두고 조선 내부의 판단은 엇갈렸고, 결과적으로 전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음. 이는 모든 위협을 과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에서는 낙관적 오판의 대가가 대비비용보다 훨씬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임
- 따라서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보다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국민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책임 있는 국가의 태도임

[4] 파수꾼에게는 위험을 정확하게 보고 경고할 책임이 있음

- 에스겔 33장은 파수꾼이 다가오는 칼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음
- 오늘날 국가안보의 파수꾼은 군 지휘관뿐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국회, 정보기관, 언론과 전문가들도 포함함.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지도자는 **전문성과 함**

께 국민과 장병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신뢰성도 갖추어야 함

- 위험을 정치적 목적으로 과장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국민의 불안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위협을 축소하거나 불편한 정보를 숨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음
- 기독교적 책임은 공포를 조장하는 데 있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필요한 경고를 제때 하는 데 있음**

[5] 국방력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과 자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문제임

- 국방은 국민의 세금과 젊은이들의 시간과 생명, 막대한 국가자원을 사용하는 영역인 만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과 자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청지기적 자세**가 요구됨
- 전차·전투기·함정·미사일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운용할 장교·부사관과 정보·훈련·정비·보급·지휘체계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함
- 군인은 단순한 '인적 자원'이나 소모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므로, 국가는 위험한 임무를 맡기는 만큼 **충분한 훈련·장비·지휘와 합당한 처우를 제공할 책임이** 있음
- 군 조직과 지휘체계 역시 오랜 시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의 산물이므로, 개혁의 기준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더 잘 지키고 실제 전투력을 강화하는가**가 되어야 함
- 따라서 숙련된 군인의 이탈과 조직 전문성 약화는 단순한 인사·조직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맡겨진 사람과 국방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청지기적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함

[6] 국방이 궁극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영토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유로운 삶임

- 국가의 목적은 국가 자체를 절대화하는 데 있지 않음. 국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생명·가정·재산뿐 아니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호받으며 살아갈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음
- 따라서 국방은 영토와 군사시설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두려움 없이 일하고 가족을 이루며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자유로운 삶의 기반을 보호하는 일**임

- 이런 점에서 국방은 신앙과 무관한 영역이 아님. **국가는 복음을 만들거나 교회를 지배할 수 없지만,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외적 질서를 지킬 책임**이 있음
- 동시에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 주민을 동일시해서는 안 됨. 북한 주민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일과 함께 **북한 주민과 성도들이 진리와 복음, 외부 정보에 접근할 자유를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핵심 정리]

- 기독교 세계관에서 국방의 목적은 적대감이나 전쟁을 확대하는 데 있지 않음. 외부의 폭력과 침략을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가정·자유·양심과 신앙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맡은 공적 책임**이며, 평화를 바라는 것과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음. 동시에 북한 정권의 군사적 위협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고, 자유와 신앙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웃으로 바라보아야 함. 국가 존립의 문제에서는 막연한 낙관보다 위험을 미리 보고 준비하며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는 **파수꾼과 청지기의 책임**이 중요함

■ E — Evaluate | 무엇이 왜곡되었는가

✔ **핵심 질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여러 안보정책과 군 구조 변화가 동시에 누적될 경우, 대한민국의 방위태세에는 어떤 구조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1] 개별 정책의 명분만 보고 전체 방위태세의 '누적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음

- 확성기 중단에는 긴장완화, 방첩사 개편에는 정치개입 방지, 군사장애물 철거에는 작전환경 변화와 주민 재산권이라는 각각의 이유가 있음.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통합 역시 자주적 지휘능력·합동성·인구감소 대응이라는 정책목적을 가

짐

-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지휘·인력·훈련·정보·방첩·경계·동맹이 하나의 방위체계로 동시에 작동**함
- 따라서 정책 하나하나의 명분보다 **여러 변화가 같은 시기에 누적됐을 때 전투준비태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해야 함

[2] 북한의 위협 증가속도와 대한민국의 대비태세 강화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함

- 북한의 변화는 특정 무기 하나의 개선이 아니라 핵탄두·미사일·장사정포·드론·해군·접경지역·실전경험의 동시 강화임
- 대한민국 역시 미사일방어·정찰·대드론·핵추진잠수함 등 여러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평가는 사실과 맞지 않음
- 핵심은 북한의 위협이 변화하는 속도와 성격에 비해 **한국군의 실제 대응능력·인력·훈련·전쟁지속능력이 충분히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가**임
- 군사력은 무기의 절대적인 숫자보다 상대의 위협을 억제하고 실제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가해야 함

[3] 평화를 위한 긴장 완화와 상호성 없는 억제·정보수단 축소를 구별해야 함

- 남북 간 우발충돌을 줄이고 대화를 복원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며, 2025년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중단 이후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처럼 **상호조치가 나타난 사례**도 있음
- 민간 대북전단·풍선 역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충돌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반대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북전단 문제를 단순히 ‘평화를 해치는 행동’ 또는 ‘반드시 보장해야 할 정보전’으로만 보지 말고, **접경주민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정보·신앙의 자유를 함께 평가**해야 함
- 북한이 핵, 미사일, 접경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확성기·훈련·경계 등 억제수단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면, **북한도 이에 상응해 군사적 위협과 도발행위를 실제로 줄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평화정책은 의도보다 **실제 긴장을 낮추면서 대한민국의 억제력과 국민의 자유를**

함께 지키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4] 대규모 군 조직개편은 국방수장의 전문성·신뢰와 치밀한 전환관리를 요구함

- 계엄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군의 정치개입 차단은 민주적 문민통제를 위해 필요함
- 그러나 핵심 지휘관 교체, 방첩조직 재편, 장교 양성체계 개편, 전작권 전환 준비 등 **군의 여러 핵심 체계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변화**하고 있음
- 이처럼 대규모 개혁이 중첩되는 시기에는 **국방수장의 군사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판단능력, 조직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관리역량, 장병과 국민의 공적 신뢰가 더욱 중요함**
- 군 개혁의 성공은 조직을 얼마나 많이 바꾸었느냐가 아니라 **전문인력과 경험을 승계하면서 실제 전투력·지휘안정성·조직 사기를 높였는가**로 판단해야 함

[5] 첨단무기의 숫자와 실제 전투력을 동일시해서는 안 됨

- 전투기·전차·자주포·미사일·함정은 숙련된 사람이 운용하고 정비·통신·보급·지휘체계가 작동해야 전투력이 됨
- 특히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견 장교와 부사관의 경험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됨
- 중견간부 희망전역 증가와 신규간부 감소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첨단무기 확보가 늘어나도 이를 운용할 조직의 숙련도가 따라가지 못할 수 있음
- **첨단무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무기를 능숙하게 운용할 숙련인력을 함께 확보하고 유지해야 실제 전투력이 됨**

[6] 북한은 실제 전쟁에서 배우고 있는 만큼 한국군의 실전적 훈련은 더 중요해지고 있음

- 북한군 일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포병·전자전·지뢰·참호전과 대량소모전을 직접 경험하고 있음
- 한국군이 실제 전쟁을 겪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실전 경험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연합훈련과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전쟁계획과 작전능력을 반복 검증하는 것이 중요함**

- 2025 UFS 훈련은 결국 완료됐고 2026 FS 지휘소연습도 예정대로 실시됐으므로 단순히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2026 FS의 현장훈련 감소와 UFS의 갑작스러운 단축까지 이어진 만큼 **훈련의 총량·집중도·실전성이 실제로 충분한가**는 엄격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7] 대공수사와 군 방첩체계의 개편은 '권한의 소재'보다 실제 방첩능력으로 평가해야 함

- 과거 국정원과 방첩사의 권한남용이나 정치개입 문제가 있었다면 이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함
-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전 이후에는 **국정원 정보와 경찰 수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방첩사 해체 이후에는 **분산된 방첩·수사·보안 기능과 전문인력·축적정보가 안정적으로 승계되는지**가 중요함
- 군 방첩은 정보수집·분석·추적·수사·보안조치가 긴밀히 연결돼야 하므로, 기능 분산 이후 **통합성·신속성·전문성이 약화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음
- 현대 방첩은 북한 공작뿐 아니라 외국 정보기관, 사이버 침투, 방산·산업기술 탈취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개혁의 성패는 어느 기관이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정보수집→분석·추적→수사→보안조치·기소>까지 실제로 빈틈없이 이어지는가**로 판단해야 함

[8] 접경지역의 위험은 커지는데 방어시설 조정과 장병 안전대응에는 더 엄격한 검증이 필요함

- 북한은 철책·지뢰·대전차장애물·전술도로를 확대하고 600㎜ 방사포와 장사정 화력까지 전방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반면 대한민국은 민통선을 북상시키고 군사적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한 군사장애물 23개소를 철거하기로 함
- 기존 시설의 효용이 감소했다면 철거 자체가 반드시 전투력 약화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지연·차단·감시 기능이 새로운 체계로 실제 대체됐는지 먼저 검증**해야 함
- 최근 DMZ 지뢰 추정 폭발사건은 북한 접경지역 지뢰공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정보·탐지·수색절차와 사고 후 신속한 원인규명 체계가 충분한지 다

시 묻게 하는 사건임

[9] 한미동맹은 강력한 방패이지만 미국의 전력과 정책도 고정된 상수가 아님

- NCG와 확장억제 공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억제체계의 핵심축임
- 그러나 중동 지역 전쟁 과정에서 한반도 배치 패트리엇·THAAD 관련 전력이 실제 이동 또는 차출 준비에 들어갔고, 2026 UFS는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미 시작된 뒤 절반 이하로 단축됨
- 정동영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이 일부 민감한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한 사건은 **동맹의 실효성이 병력과 무기뿐 아니라 민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호신뢰에도 좌우됨**을 보여줌
- 따라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즉각적인 대규모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 버틸 자체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10]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상징보다 실제 군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한국군이 자국 방위를 보다 주도적으로 지휘할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목표임
- 한미 역시 현재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임기 내 완료라는 정치적 목표보다 정보·감시·정찰, 북핵 대응, 연합지휘통제, 미사일방어, 군수·증원 능력 등 **실제 조건의 충족 여부가 우선**되어야 함
- 전작권 문제는 자존심이나 이념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누가 더 효과적으로 연합전력을 지휘할 수 있는가라는 군사적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핵심 정리]

- 대한민국의 국방이 무너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한국군과 한미동맹에는 여전히 상당한 방위능력이 존재함.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다층적으로 강화되는 시기에 **지휘·인력·훈련·정보·방첩·접경경계·동맹체계의 취약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각각의 작은 균열이 서로 연결돼 전체 방패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방·대북정책은 개별 조치의 명분보다 **모든 변화가 누적된 결과 대한민국의 억제력과 전투준비태세, 국민의 안전과 자유가 실제로 더 잘 보호되고 있는가**를

최종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W — Way Forward |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 **핵심 질문:**

"북한의 핵·미사일·드론·하이브리드전 능력이 고도화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1]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한 '최소 안전선'을 가져야 함

-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면 기대보다 **상대가 실제 보유한 능력과 행동을 기준으로 대비**하는 것이 안전함
- 핵공격·기습도발처럼 가능성이 낮아 보여도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치명적인 위험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비가 필요함
- 지휘·정보·훈련·동맹·접경위협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위기까지 가정하고, 감시·훈련·방첩·미사일방어 등에는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켜야 할 **최소 안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대북 긴장완화 정책은 '상호성·검증가능성'과 '안전·자유의 균형'을 함께 살펴야 함

- 남북 간 긴장완화와 대화는 필요하지만, 확성기·훈련·경계수단 등을 조정할 경우 북한도 **실제 상응하는 군사적 변화를 보이는지 검증**해야 함
- 대북전단·풍선 문제에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정보·신앙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함
- 위험성이 큰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통로**를 함께 모색해야 함
- 평화정책은 **실제 충돌 위험을 낮추면서 대한민국의 억제력과 자유도 함께 지키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3] 군 개혁은 국방수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투력의 연속성을 우선해야 함

- 문민통제는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지만 북핵·연합작전·전작권·드론전 등 고도의 군사현안을 다루는 국방수장에게는 **충분한 군사적 이해와 판단능력, 장병과 국민의 신뢰**도 중요함
- 방첩·드론작전·장교양성·지휘체계 등을 개편할 때에는 전문인력·정보·작전경험이 새 조직으로 충분히 승계되는지 먼저 검증해야 함
- 군 개혁의 성과는 조직을 얼마나 많이 바꾸었는지가 아니라 **개혁 이후 실제 전투력, 지휘 안정성, 대응속도가 더 좋아졌는가**로 평가해야 함

[4] 숙련된 장교·부사관을 지키는 것을 첨단무기 확보만큼 중요한 국방정책으로 다뤄야 함

- 인구감소 시대에는 적은 병력으로 더 많은 첨단무기를 운용해야 하므로 숙련간부의 가치가 더욱 커짐
- 급여뿐 아니라 주거·당직·격오지근무·가족생활·진급·장기복무·전역후진로까지 포함한 **직업군인의 생애복무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첨단무기에 투자하면서 그 무기를 운용하는 숙련인력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력 유지 자체를 핵심 국방투자**로 다뤄야 함

[5] 한미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일정보다 실제 군사능력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함

- 지휘소연습뿐 아니라 병력·장비 이동, 대화력전, 공중·해상작전, 보급·후송을 포함한 실전적 야외훈련을 충분히 유지해야 함
- 북한의 핵사용·미사일·드론·전자전·사이버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상황을 한미연합훈련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전작권 전환 역시 특정 연도를 먼저 정하기보다 정보·감시·정찰, 북핵 대응, 연합지휘, 미사일방어, 군수·증원 등 **실제 군사적 조건을 충분히 충족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함

[6] 대공수사와 군 방첩체계는 조직의 이름보다 실제 정보수집·수사능력을 기준으

로 보완해야 함

- 국정원·경찰·군·검찰 간 **정보공유와 사건 공조체계를 강화해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정원의 해외·대북 정보능력과 경찰의 강제수사권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장기간 경험을 쌓은 전문 대공수사 인력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방첩사 개편 이후에도 대북·외국 정보활동 탐지, 방산보안, 사이버방첩 능력이 이전보다 약해지지 않았는지를 실제 성과로 검증해야 함

[7] 드론·전자전·AI와 북한의 해상·수중 핵전력에 대응하는 새로운 전쟁체계를 구축해야 함

- 드론을 보병·포병·기갑 등 각 군의 기본전력으로 확대하면서 대드론 탐지·전자교란·요격능력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드론작전체계가 각 군으로 분산되더라도 정보·탐지·지휘·타격을 통합할 **합동운용체계를 유지**해야 함
- 북한의 핵추진 전략유도탄잠수함과 해군 핵전력화에 대응해 해상초계기·대잠헬기·잠수함·수중감시체계와 한미 연합대잠훈련을 강화해야 함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추진 역시 실제 대잠수함전·감시·억제체계와 연결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8]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신속한 원인규명과 장병 안전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함

- 안전을 확보하는 즉시 **현장감식과 폭발물 분석을 통해 지뢰의 종류와 매설 주체를 최대한 신속하게 규명**하고, 확인된 사실과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함
- 북한의 의도적 매설이나 도발로 확인될 경우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군사·외교적 대응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며, 북한 소행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 결과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함
- 동시에 **지뢰탐지·무인수색장비와 수색절차를 보강해 장병의 안전을 높이고**, 기존 군사장애물을 조정·철거할 때에는 대체 방어수단이 실제 전시에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검증해야 함

[9] 한미동맹과 자체 전쟁지속능력, 정보공유 신뢰를 함께 강화해야 함

-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미국 역시 여러 전구에 한정된 전력을 배분해야 함
- 한국은 포탄·미사일·방공요격탄·드론·연료·부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전시에 국내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할 **군수·산업동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군사자산뿐 아니라 핵·미사일·위성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상호 신뢰 속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보안과 동맹 간 정보신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자체 방위능력은 서로 대체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함께 갖춰야 할 두 축**임

[10] 정부와 국회는 대한민국의 '방패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함

- 중견간부 충원, 연합훈련, 방첩, 대드론·대잠전, 탄약·요격탄 비축, 접경경계 등 주요 준비태세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군사기밀은 보호하되 안보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제없다"는 설명보다 **확인된 사실·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보완계획을 구분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함
- **국민의 신뢰는 위험을 축소하는 데서가 아니라 위험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제로 대비하는 과정에서 형성됨**

[11] 한국 교회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남북한 모두의 생명과 자유를 바라보는 파수꾼이 되어야 함

- 교회는 전쟁을 부추기거나 북한 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서는 안 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함
- 동시에 북한의 핵·군사위협을 외면하거나 막연한 낙관주의에 머물러서도 안 됨. **평화를 사랑하는 것과 나라를 지킬 충분한 힘을 준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음**
- 한국 교회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고, **억압 속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도와 관심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함**
- 또한 군 복무 청년과 직업군인 가족을 돌보고, 다음 세대에게 **국가의 정당한 방위책임과 북한 주민에 대한 사랑, 자유와 신앙의 소중함을 함께 가르쳐야 함**

[핵심 정리]

- 대한민국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목적은 전쟁을 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데 있음**. 북한의 위협이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확대되는 만큼 대한민국도 지휘·사람·훈련·방첩·신형전력·군수·동맹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함. 평화와 긴장 완화를 추구하되 억제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접경지역의 안전과 북한 주민의 정보·신앙의 자유도 함께 고려해야 함**. 한국 교회 역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책임과 북한 주민을 사랑하는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함

■ Action Checklist

□ 나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과 “곧 전쟁이 난다”는 과도한 공포를 모두 경계하고,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위협을 판단한다.

□ 나는 북한의 핵·미사일뿐 아니라 드론, 장사정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경험, 접경지역 군사시설 등 변화하는 현대전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살핀다.

□ 나는 최첨단 무기만큼 숙련된 장교·부사관과 군 장병의 사기·전문성·복무환경이 중요한 국가안보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

□ 우리 교회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장병과 가족을 돌보고, 자유와 신앙이 억압받는 북한 주민과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갖는다.

□ 우리 교회와 지도자는 안보·대북문제를 정당의 구호가 아니라 생명·자유·평화·안전·신앙의 자유라는 원칙으로 분별한다.

■ Final Message

□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미사일·600㎜ 방사포·드론·핵추진 잠수함 등 다양한 전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접경지역 요새화를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 실전경험까지 축적하고 있음

□ 대한민국도 첨단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군 지휘·숙련인력·연합훈련·대공수사·방첩·전작권 등 방위체계의 핵심 요소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국가안보에서는 각 정책의 명분보다 모든 변화가 누적된 결과 실제 억제력과 전투준비태세가 더 강해졌는지를 물어야 함

□ 대한민국의 방패는 첨단무기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음. 신뢰받는 지휘, 숙련된 군인, 실전훈련, 정보·방첩, 군수지원, 굳건한 한미동맹과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함께해야 함

■ 기도 제목

1. 대한민국이 전쟁을 억제할 충분한 힘과 지혜를 갖추도록

-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지도자들이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게 하소서. 북한의 핵·미사일·드론 등 군사적 위협에 충분히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할 튼튼한 국방태세와 지혜를 갖추게 하소서.

2. 군 지휘관과 장병들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의 군대가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군인을 보호하여 주소서. 지휘관들에게 정확한 판단과 용기를 주시고 장교와 부사관들이 사명과 자부심으로 복무하며, 전문성·기강·사기와 전투력이 살아 있는 군대가 되게 하소서.

3. 국가 지도자와 한국 교회가 지혜로운 파수꾼이 되고 북한의 교회와 주민들에게 자유의 길이 열리도록

-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현실의 위험을 분별하는 파수꾼으로 서게 하소서. 북한 주민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진리와 복음에 접할 길을 열어 주소서.

※ 본 리포트는 2026년 9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참고: 최근 SIEW REPORT 목록

- [2026년 제9호] “대한민국의 방패에 균열이 가고 있다 - 북핵 고도화 시대, 대한민국의 방위태세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다”
- [2026년 제8호] “2026 농지법 개정, 농지 보호인가 ‘농지 몰수’인가 - 처분명령 의무화와 ‘농지가액의 25%’ 이행강제금의 명암”
- [2026년 제7호] “가공할 중국의 위협 -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오늘의 중국’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 [2026년 제6호] “폭등과 폭락 사이, 한국 증시는 무엇에 흔들리는가? - AI 반도체·환율·정부정책·레버리지와 기독교인의 자산관리”
- [2026년 제5호] “검찰청 폐지 이후, 국민의 권리는 누가 지키는가? -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국민 보호의 공백”
- [2026년 제4호] “인천시장 선거 송도1동·송도2동의 3,030표와 1,440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 통계적 의심과 민주주의 신뢰의 과제”
- [2026년 제3호] “선관위는 누가 감시하는가? - 선거의 공정성, 민주주의의 신뢰, 그리고 교회의 책임”
- [2026년 제2호] “한국 상황에서 ‘유신진화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2026년 제1호] “6.3 지방선거, 한국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위 SIEW REPORT는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 홈페이지(www.siew.or.kr)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